

공 개



의안번호	제 392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12. 2. (제 21 차)

의
결
사
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2. 2.

1. 의결주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6.22일에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통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한 대부업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영업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 정비(안 제2조 1호 및 2호)

대부업의 정의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전의 대부나 대부채권의 매입 후 추심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수취하는 이익의 명목과 관계없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개, 알선, 주선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함

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 변경(안 제2조 7호 및 8호)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그 명칭을 변경함

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신설(안 제6조 제5항)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대부계약서나 계약관계서류를 양도받은 날로부터 채무 변제일(또는 채권양도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도록 규정

라. 원리금 변제시 계약서류 원본 반환의무 신설(안 제6조 제7항 및 제21조 제2항)

대부계약의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이 채무변제가 완료된 경우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불법이득 제한(안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상한을 상사법정이율인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를 증액하여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탈법적 형태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대출계약을 무효화함

바.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9조 및 제21조)

햇살론 등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임을 사칭하는 광고는 현재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대부업의 등록 및 등록갱신 없이 대부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하여 이자를 수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상향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0.6.29.~2020.8.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전의 대부”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로,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를 “한다) 하거”로,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부중개업”이란 수취하는 이익의 명목과 관계없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개, 알선, 주선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서나 보증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는 양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채무변제일(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하였거나,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양도계약서 또는 반환요구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⑦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계약에 따른 원리금 변제가 완료된 경우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거나,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제9조의4의 제목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을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를 “불법사금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

약정을 포함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율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원금에 포함하여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부계약 중 연체이자를 원금으로 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⑤ 채무자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채무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대부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미 주고받은 금원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그 금원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2. 제9조의3제1항제3호의 행위를 한 자

제21조제1항제9호 중 “각 호”를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원본의 반환을 거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갹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대부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이 법 시행 이전에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시행 이후에 대부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대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허위·과장 광고 금지 위반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제9조의3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제19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대부업”이란 <u>금전의 대부</u>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u>업(業)으로 하거나</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u>것을 업으로 하는 것</u> 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u>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u> ----- ----- <u>한다)하거</u> ----- ----- ----- ----- ----- <u>것</u>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u>업으로 하는 것</u> 을 말한다.	2. “대부중개업”이란 수취하는 <u>이익의 명목과 관계없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개, 알선, 주선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u> 을 말한다.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u>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u>

<신 설>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 ④
(생략)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서나 보증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는 양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채무변제일(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거나,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양도계약서 또는 반환요구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생략)

<신설>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② (생략)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

⑥ (현행과 같음)

⑦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계약에 따른 원리금 변제가 완료된 경우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거나,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불법사금융업자-----

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신설>

<신설>

-----.

② ----- 불법사금융중개업자-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약정을 포함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율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원금에 포함하여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부계약 중 연체이자를 원금으로 한 부분은 무효로 한

<신 설>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 ⑥ (생략)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다.

⑤ 채무자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채무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대부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미 주고받은 금원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그 금원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
----- 불법사금융업자-----
-----.

② -----
----- 불법사금융중개업자-----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벌칙) ① -----

----- 1억원 -----

--.

1. 2. (현행과 같음)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신 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삭 제>

<삭 제>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2. 제9조의3제1항 제3호의 행위를 한 자

④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 10. (생략)

③ (생략)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략)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 1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 5. (생략)

<신설>

6. ~ 10. (생략)

③ (생략)

<삭제>

4. ~ 10.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10. ~ 12.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
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
서류 원본의 반환을 거부한 자

6.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가계금융과	여신금융검사국
연 락 처	02-2100-2511	02-3145-8260